

[종합·해설]

민선 4기 과제와 전망

② '일당 독식' 견제 필요하다

주민참여로 비리·남용 막아야

5·31 지방선거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회에도 '민주당 독점'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낳았다. 정당 비합에 힘입어 기초단체장의 55.6%, 광역의원 의석의 91.4%, 기초의원은 64.3%를 거머쥔 민주당이 지방행정과 의정운영을 모두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당 독식'이나 다름없는 이같은 구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선 자치 시행 이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작동할 여지가 오히려 크게 줄어 자치단체의 비리나 예산낭비,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단체장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다음달 초 개원하는 차기 지방의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힘의 논리로 이끌어갈 경우 '집행부 감싸기'는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 이들

이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자치 지역 대형 현안이 발목을 잡고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 결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모두 민주당 몫이 됐다.

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5곳에 당선자를 냈다. 광주 5개 구청장

명에 불과하다. 광주시의회는 경우 지역구 16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비례대표는 민주당 2명, 열린우리당 각 1명으로 총 19명 중 민주당 18명(94.7%), 열린우리당이 1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초 원구성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설 상임위원회 위원장(4명), 예결위원장 등 투표

광주·전남 집행부·의회 민주당이 장악 '견제·균형' 실종 우려... '소환제' 활용을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싸늘이'했다. 전남은 민주당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강진, 해남, 담양, 보성, 고흥, 화순 등 10곳을 차지했고, 열린우리당은 무안, 완도, 진도, 구례, 영암 등 5곳에서 당선됐다. 무소속은 나주와 함평, 장성, 곡성, 장흥, 영광, 신안 등 7곳에서 당선에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광역의회는 의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민주당 소속으로 재편됐다. 총 70명의 의원 가운데 비민주당은 6

로 선출하는 의장단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도 총 51명 중 민주당 46명(90.2%), 열린우리당 3명, 민노당과 무소속이 각 1명이다. 기초의회 역시 27개 시·군·구 대부분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해 의회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광역의회 보다는 나은 편이다.

광주지역 기초의원(비례대표 포함 68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9명(57.4%), 열린우



■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의원 정당별 분포

의원	정당	우	민	노	무
광역의회		70	4	64	1
광주시의회		19	1	18	
전남도의회		51	3	46	1
기초의회		311	60	200	11
광주광역시의회		9	2	7	
광주광역시의회		13	4	7	2
광주광역시의회		12	5	7	
광주광역시의회		20	8	10	2
광주광역시의회		14	1	8	4
목포시의회		22	4	15	1
여수시의회		26	11	14	1
순천시의회		23	6	14	1
나주시의회		14	9	5	
광양시의회		12	3	6	3
담양군의회		8	1	8	
장성군의회		8	1	5	2
곡성군의회		7	1	6	
구례군의회		7	6	1	
고흥군의회		12	2	7	3
보성군의회		9	5	4	
화순군의회		10	7	3	
장흥군의회		7	1	4	2
강진군의회		8	1	5	2
완도군의회		9	3	5	1
해남군의회		11	1	8	2
진도군의회		7	1	5	1
영암군의회		9	2	6	1
무안군의회		7	1	5	1
영광군의회		9	8	1	
함평군의회		7	5	2	
신안군의회		10	1	8	1

■ 우=열린우리당, 민=민주당, 노=민주노동당, 무=무소속

우리당 "취득·등록세 인하" 정부 "일관성 훼손...안된다"

당-정 '부동산 정책' 갈등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세금 정책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여당은 ▲취득·등록세를 내리고 ▲양도세 부담을 낮추며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경우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정책을 일순간에 바꾼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취득·등록세 인하=열린우리당은 거래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아직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판단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조치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중부세, 거래세수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 1월 거래세를 인하한 이후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거래세 추가인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는 열린우리당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일 뿐"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거래세 인하 여부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도세 부담 완화=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자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는 보유세와는 달리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어서 소득이 생겨야 부과되는 데다 양도세 강화는 8·31대책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에 여당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1가구1주택자는 3년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으며 이런 면세조치는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은 소득세율과 같은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양도세율을 특별히 내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것은 양도세 부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줄여주기=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고가주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실수요 1가구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감해주시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가 3억원짜리 2채의 보유자보다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관련,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수요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실용-개혁과 노선대립 더 심화

'비대위 구성' 가닥 잡은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비상대책위 구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지방선거 참패 이후 벌여졌던 당내 내홍은 봉합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열린우리당 내의 실용주의와 개혁파간의 노선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참패라는 당내 위기상황에서 후속 지도부 교체 문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양대 계파간 쌓여온 극도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내 구주류와 중진그룹에서 김근태 최고위원의 의장직 승계 및 비대위원장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개혁 지향적인 재야파에 대한 비토라는 것이다.

특히 김근태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재야파와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참정연이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구 주류측의 심리적인 반발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용파로 분류되는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이 정동영 전 의장의 민투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선언하며 김근태 최고위원의 의장직 승계를 막고 지도부를 와해시킨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실용파는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실용-개혁 노선 갈등을 더 이상 덮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가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는 논리로 김근태 의원에 대한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개혁파는 이 같은 실용파의 움직임에 대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의 지지가 하락한 것은 실용파의 적당주의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개혁파로 분류되는 모 의원은 "이렇게 당을 이끌려면 아예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이처럼 양측이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과 향후 대처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누가 비대위를 맡든 향후 당을 수습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용-개혁파의 노선 대립은 향후 정계개편과 맞물리면서 열린우리당의 핵분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불안정한 당의 상황이 정계개편론과 관련한 외부 요인과 결합한다면 분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P Smart Office Solutions

현금으로 돌아온다! HP 캐시백 페스티벌

HP 레이저젯을 사면 레이저젯도 돈이 되어서 현금으로 돌아온다! HP 캐시백 페스티벌! 최고의 레이저 프린터를 사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찬스! 지금 HP 캐시백 페스티벌을 구매하면 최대 45만 원까지 캐시백! 캐시백은 HP 레이저젯 프린터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세금 제외) 캐시백은 HP 레이저젯 프린터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세금 제외) 캐시백은 HP 레이저젯 프린터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세금 제외)

HP 레이저젯 2420n 최대 75,000원 캐시백	HP 레이저젯 4250 최대 110,000원 캐시백	HP 레이저젯 5200L 최대 110,000원 캐시백
HP 레이저젯 3090 최대 20,000원 캐시백	HP 레이저젯 3600 최대 120,000원 캐시백	HP 레이저젯 3600 최대 180,000원 캐시백
HP 레이저젯 3600dn 최대 220,000원 캐시백	HP 레이저젯 4700dn 최대 390,000원 캐시백	HP 레이저젯 5550 최대 450,000원 캐시백

SMART ADVICE > SMART TECHNOLOGY > SMART SUPPORT

HP 캐시백 페스티벌 (2006.6.1 - 8.19)

제품번호: 080-703-0710
행사번호: 1588-0410
www.hp.co.kr/event/lj-cashback